

# 도시농업 올바른 이해로 육성에 나서야

도시농업은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늘 농(農)을 배려하고 이끄는 상생의 그림이라야 밝은 미래로 존재한다. FTA 등 무한경쟁체제에 놓인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도와주는 것 또한 도시농업과 정통농업과의 상생의 틀을 공고히 다지는 한 가지 작은 예일 것이다.

‘도시농업(都市農業, City Agriculture)’이란 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이다. 10여 년 전 IMF 국가부도사태 이후 도시소비자들의 탈(脫)도시 현상인 귀농·귀촌운동 이후 농업계에는 도시소비자가 주축이 된 다양한 형태의 농어업·농어촌을 향한 운동이 일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슬로푸드운동·친환경학교급식운동·로컬푸드운동 등인데 특이점은 그 주축이 농민이 아닌 소비자국민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성향은 농업인 못지않게 농업·농촌에 애정을 갖고 있고 특히 지역 환경과 나와 가족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남다르다. 그래서 직접 아파트 내에 좁은 베란다나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꽃과 채소를 기르고 소위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소박한 가족밥상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아파트단지가 생겨나면 빈 공간엔 으

레 텃밭이 조성되고 있다.

아마도 ‘도시농업’이란 표현이 처음 나온 곳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아닐까 한다. 센터에서는 1992년 봄에 강남구 세곡동 일대에 서울거주 주부들을 대상으로 텃밭농사를 시작한 바 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주말농장인 대원농장이 1992년 가을에 381구좌로 개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그로부터 10년 후 2002년 ‘친환경 도시농업 기술지도 보급전략’을 수립하면서 2005년 1월 ‘도시농업팀’을 처음 도입하게 된다. 국립국어원 2004년 ‘신어자료집’에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에서는 「도시내부에 있는 소규모농지에서 경영하는 농업」으로 설명한다. 틀린 풀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흠족한 풀이에는 미흡하단 생각이 든다.

도시농업은 지역과 장소의 문제보다는 누

가 하느냐 주체의 문제이고, 왜 하는지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주체가 도시소비자다. 이들은 농어업을 적극 이해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을 목적으로하여 비영리성 소규모 농업의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업적 접근방식의 근교농업(Urban Agriculture)과 다르고 50% 이상의 먹거리를 조달하는 쿠바 아바나 시의 도시농업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엄격히 말하면 도시농업은 도시인농업(City Farmer's Urban Agriculture)에 더 가까이 가 있다.

### 먹거리보는 안목, 건강·정책에지

앞에서 언급한대로 도시농업에서 충족되는 전제조건은 농업 행위자의 주체문제이다. 최첨단농업형태인 빌딩형 농업이나 아파트형 농업은 비록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은 아니다. 도시농업의 개념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도시농부(city farmer)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농산물 생산은 생활문화에 한 작은 일부분일 뿐 목을 뭇 정도의 생계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소비자 성향이 강하다. 언제라도 소비자 주권을 주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프로농민을 비판할 수 있고 불량농산물 근절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농업은 비영리성이 전제된다고 봐야 한다. 시민농부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상추 몇 포기 심는 정도의 수준이다.

혹시 잉여농산물을 이웃에게 판다고 해도 그 개념은 상식적 수준을 넘지 못한다. 베란다나 옥상에 채소 한포기를 기르고 더 나아가 흙을 밟아 보고 싶은 자연에 대



신동헌  
도시농업포럼 대표

한 본능적 욕구에 이끌리어 도시 빈 공간 자투리땅을 찾아서 흙을 일구는 정도다.

시민농부의 주된 직업은 따로 있다. 어린 학생이기도 하고 전업주부 경찰관 의사 변호사 야구선수 선생님 공무원 국회의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을 한다. 당연히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다. 농업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은 크지만, 실제 이들은 작은 농사(10~16.5m<sup>2</sup>) 관리도 “힘들다”라고 하소연을 한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적게 잡아도 5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인 인구 20%에 육박하는 숫자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교육청은 인성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학교텃밭 가꾸기를 통하여 무료급식의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귀농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에서도 각자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작물과 토양의 이해, 텃밭의 병해충과 잡초관리에 관한 교육 등 이론과 실제의 기초를 다진다. 이렇게 도시농업이 성행하는 이유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가꿀 수 있는 장점 덕택이다. 또한 가족 간, 이웃 간에 친목은 물론 농산물을 바라보는 안목과 먹거리에 대한 생각이 건강해지고 정확해진다.

### ‘저탄소녹생성장’ 어젠다와 부업

도시농업에서 가장 널리 퍼진 건 주말농장 형태다.

주말농장은 말 그대로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농사를 짓는 형태다. 주중에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주말만 되면 자연 속에서 식구들과 함께 소규모의 밭(10-30㎡정도)에서 땀을 흘린다. 주로 봄에는 쌈 채소 종류나 감자 고추 등을 심고 가을에는 김장용 배추·무를 심어서 김장까지 준비한다.

서울에만 60여개의 주말농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광주 양평 남양주 등 팔당 상수원 지역 13개 곳에 23,000㎡(7,000평)의 땅을 확보하여 도시소비자에게 복지차원의 혜택을 준다. 물론 환경과 물과 땅을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경제성 또한 실하다.

주말농장이 주로 자동차로 이동하여 주말을 이용하는 도시농사라면 텃밭농장은 거리 개념이 없는 형태의 농사다. 생활 집에 붙어 있거나 아파트 근처에 텃밭을 공동 혹은 단독으로 조성하여 농사를 짓는다. 아침저녁

수시농사가 가능하여 프로농업인 수준의 농사 실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규모가 330㎡(100평) 이상인 경우도 많아 다양한 농산물 재배가 가능하다. 당연히 쌀과 육류 생산 이외에는 모두 자급하고 남은 농산물은 이웃과 나누기도 한다.

이 밖에도 요즘은 옥상텃밭을 만든다거나 베란다에 텃밭상자를 설치하여 가정원예를 실천하는 시민농부 또한 많아졌다. 재배기술이 뛰어난 가정은 무순·새싹부터 베이비채소·각종 허브류·미니열매채소에 이르기까지 텃밭 이상의 다양한 채소를 매일매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린다. 수송거리 제로 농산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세계의 각국의 관심은 어떤가? 일본은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이 1990년에 제정되어 건강하고 여유있는 국민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형성과 농촌지역 진흥에 이바지 하고 있다. 시민농원은 8천개에 이른다. 특히 2001년부터 옥상텃밭 조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대도시에 농지율 30%확보를 위한 제도가 있어 도시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영국의 애롯트먼트 가든(Allotment Garden)은 도시구획 안 공유지에 시민농원을 조성하여 시민에 의한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해 준다. 일반적으로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농업을 세계적 도시농업의 성공모델로 추켜세우고 있으나

## 도시농업 올바른 이해로 육성에 나서야

이는 독일에 주말채류휴식형인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과 함께 우리의 한국형 도시농업과는 출발부터 개념의 차이가 있다.

최근 미셸 오바마는 백악관에 작은 채소 텃밭을 만들어 55가지의 채소를 심었다. 또한 청와대에서도 작은 텃밭을 추가 조성했다. 소박한 도시농업의 한 단면이기 전에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의 회복을 위한 작은 운동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2013년이면 온실가스의 의무감축 대상이 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지불 대상 국가가 된다. 출발은 “우리 집 먹을거리는 우리가 직접 채긴다.”라는 소박한 소시민적 발상과 필요에 의해서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환경을 걱정하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미래 도시농업은 도시환경이 우선시 되는 접근방식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유지발전은 도시환경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특히 회색도시에 옥상 텃밭 조성은 먹거리와 볼거리, 커뮤니티 공간의 장과 함께 온실효과의 저감과 열섬효과(熱島效果)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현안이다. 이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중심에 내세운 국가 어젠다에도 부합된다.

### 정통농업과 상생의 틀 다지는 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의 도시농업은 개념정리부터 걸음마 단계다. 앞으로 발전

적인 측면의 연구와 제도적 보완 검토가 마땅한데 시급성을 요하는 대목도 있다.

첫째 주차장과 쉼터, 부지확보 문제 등이다. 주말농장은 대개 도심에서 보통 1시간 내외 거리에 있다. 자동차 운행이 불가피하다. 회원수가 400명 이상 되는 주말농장은 몸살을 앓는다. 하지만 대부분 서울 근교는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이다.

둘째 도시농업은 하고자 원하는 시민들에게 서울도심근교에 국공유지 임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여있는 도심 빌딩 숲을 옥상텃밭으로 활용하는 제 범규나 활성화 방안을 찾아 보아야 한다.

셋째 정통 프로농민과의 상생의 틀 정립이다. 도시농업과 기존 농업은 여러모로 배치된다. 취미농업·재미농업·여유농업·휴식농업·환경농업·건강농업 등이 도시농업의 본질이라면 프로농업의 속성은 수량과 가격, 비료나 화학농업으로 볼 수 있다. 농업이라는 ‘농(農)’자만 같을 뿐이다. 하지만 도시농업은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농을 배려하고 이끄는 상생의 그림이라야 밝은 미래로 존재한다. FTA 등 무한경쟁체제에 놓인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도와주고 지산지소(地產地所)와 함께 친환경학교급식 운동 등을 펼치는 일은 도시농업과 정통농업과의 상생의 틀을 공고히 다지는 한 가지 작은 예일 것이다. Y